



문서번호 : 12-02-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조덕상 간사, 02-522-7284)
제 목 : [성명]사회적 갈등과 반발만을 야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규탄한 다.
전송일자 : 2012년 2월 29일(수)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3매

[성명]

사회적 갈등과 반발만을 야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규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의 항만 설계 상태에서 서도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 톤 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일방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세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생각해 참여정부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정책으로 야당의 제주해군기지 취소는 말 바꾸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은 국무총리실이 2011. 1. 26. 국회 예결위의 권고에 따라 구성한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2012. 2. 14. 채택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 검토결과에 정면으로 반한다. 검토 결과는 현재의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항)의 설계가 풍속값, 크루즈선의 횡풍압 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 운항난이도 등에서 모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부가 공사강행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방부의 '15만 톤 급 크루즈 입출항에 문제 없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것은 위와 같은 기술검증위원회의 검토결과

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군 측의 일방적 자료로써 그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사강행 방침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기본협약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입장에도 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 27. 국무총리실로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노력하여 각각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들이 항만설계변경 및 선박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비추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현명한 정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항만설계오류 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설계대로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는 당연히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말 바꾸기 책임 전가 발언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국회의 권고에 따라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와 제주도의 합리적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이를 묵살한 채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의 명분으로 국방부의 신뢰할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세워 서둘러 공사강행을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강정마을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향하여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으면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좇아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화하고 심사숙고하여 정부정책을 변경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전 정부가 결정한 잘못된 정책이라도 그대로 따르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야당의 말바꾸기를 비판할 수 있어 여론에 불리하지 않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반발을 야기할 뿐이다.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과정에서 체포와 투옥된 수많은 이들의 희생도 모자라 다시금 서슬퍼런 체포와 투옥 위협을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부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이번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제라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정책

에 반영하여 참여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 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